

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

- ◆ 중국 위안화 환율을 둘러싸고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과 중국간 마찰과 갈등이 심화
- ◆ 중국은 국제사회의 절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는 ①위안화 절상만으로 글로벌 불균형을 개선하기는 힘들고 ②수출 위축에 따라 노동집약적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대량 실업이 발생할 경우 정치체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사회적 소요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③중국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장기적 경제구조 전환정책에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는 데다 ④명시적으로 환율절상 요구를 수용할 경우 환경문제 등 다른 주요 이슈에서도 양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
- ◆ 중국도 내부적으로는 위안화 절상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외부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IMF, G20 등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환율조정을 천명하기보다는 비공개로 미국과 타협을 모색하면서 점진적인 절상 방식을 선택할 것으로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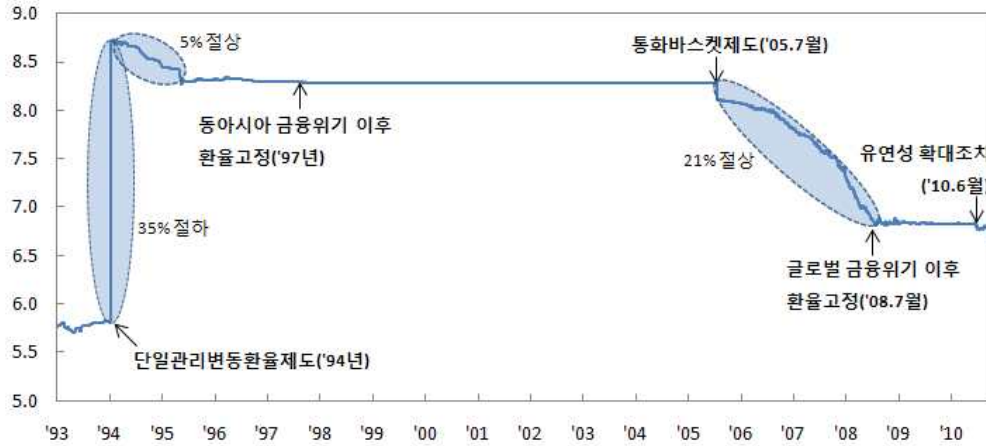
1. 중국의 환율정책 동향

- 중국은 2005년 7월 통화바스켓제도를 도입하여 3년간 21%내외의 위안화 평가절상을 용인한 후

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고정환율제도(2008.7월)로 복귀했다가 금년 6월부터 통화바스켓제도를 재운용*

* 2010. 6. 19, '위안화 유연성 확대조치'

위안화/달러 환율



□ 그러나 금년 6월 이후 지금까지 위안화 절상폭이 2% 정도에 그치자 국제사회의 위안화 절상 압력이 높아지고 있음

○ 특히 높은 실업률이 지속되는 가운데 對中 적자*가 지난해보다 커지고 있는 미국은 중간선거(11.2일)를 앞두고 중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음

* 2009.1~7월중 1,230억달러 → 2010.1~7월중 1,450억달러

— 미국은 2005~2008년과 비슷한 20~25%(2~3년간)의 절상을 원하는 것으로 보이나* 일부 강경론자들은 일시에 상당폭의 절상을 주장

* Peterson 국제경제연구소 Fred Bergsten 소장의 美 의회 증언

미국의 對中 경상수지 추이



최근 미국의 위안화 절상 압력

- 백악관 대표단의 중국 방문(9.8일)
- 상원의 환율 관련 청문회(9.16일)
- UN 총회 정상회담에서의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위안화 절상 발언(9.23일)
- 하원의 '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' 가결(9.29)

- 미국뿐 아니라 EU와 IMF, World Bank 등 국제기구들도 ‘환율전쟁’의 세계적 확산을 경계하면서도 중국이 경제대국으로서 책임의식을 갖고 위안화 가치를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
 - 그러나 중국은 자국 경제여건에 맞추어 환율정책을 운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, 위안화 절상 압력이 심해진 최근 들어 더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음
 - 지난 9.24일 美 하원이 환율조작국에 대해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‘공정무역을 위한 환율개혁 법안’을 의결하자, 중국은 9.26일 미국산 닭고기 제품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부과
 - 원자바오 총리는 위안화 대폭 절상에 따른 중국경제 불안이 세계적 재난으로 파급될 수 있음을 경고(10.6일)
- ⇒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향후 예상되는 환율정책에 대해 검토

2. 위안화 절상 요구에 대한 중국의 입장

(위안화 절상만으로는 글로벌 불균형 개선에 한계)

- 중국은 글로벌 불균형의 주된 원인이 저평가된 위안화 환율보다는 미국 등 선진국의 과다 소비와 재정적자에 있다고 주장
 - 2005.7~2008.7월중 美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이 약 21% 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오히려 증가(2005년 7,839억달러 → 2008년 8,232억달러)한 점을 근거로 제시
- 특히 미중간 무역불균형은 경제구조의 문제로 발생한 것이기 때문에 위안화 절상만으로는 이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
 - 중국의 대미 수출품 대부분은 미국에서 생산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이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하더라도 다른 경쟁국이 그 자리를 대신할 것이기 때문에 무역불균형은 개선되지 않을 것임*(친장 외교부 대변인, 3.18일)

* 모건스탠리 아시아 회장인 Stephen Roach도 Financial Times에 비슷한 취지의 글 "Blaming China will not solve America's problem"(3.29)을 기고

- 따라서 양국간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를 위해 미국은 저축을 확대하고 일부 품목의 對中 수출금지조치*를 완화해야 하며

중국은 소비여건 개선** 등 내수확대책을 추진해야 하는데 중국은 이를 위한 정책을 실행에 옮기고 있다고 주장

* 미국은 군사적 이용이 가능한 전략물자를 중심으로 첨단기술제품을 중국에 수출하는 것을 금지

** 서비스 등 내수부문 확대, 사회보장제도 확충, 금융시스템 선진화 등

□ 이러한 이유를 들어 중국 당국 및 언론은 위안화 절상 요구를 “글로벌 불균형 조정을 위한 경제적 처방”이 아닌 “위안화의 정치화”라는 관점에서 접근

○ 인민일보는 위안화 절상 압력은 선진국들이 보호무역주의를 실행하기 위한 구실에 불과하며(3.9일)

중국 상무부 야오젠(姚堅) 대변인도 위안화의 저평가로 세계경제 불균형이 초래되었다는 주장은 미국 경제의 구조적 문제를 타국에 전가하기 위한 핑계라고 주장(3.2일)

○ 더불어 외자기업이 중국 수출을 주도*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의 무역흑자에는 다른 나라 몫이 포함되어 있는데도 과도한 무역수지 흑자에 대한 비난은 중국이 홀로 지고 있다는 비판적 인식도 확산

* 2009년 기준으로 중국 전체 수출액의 55.9%를 차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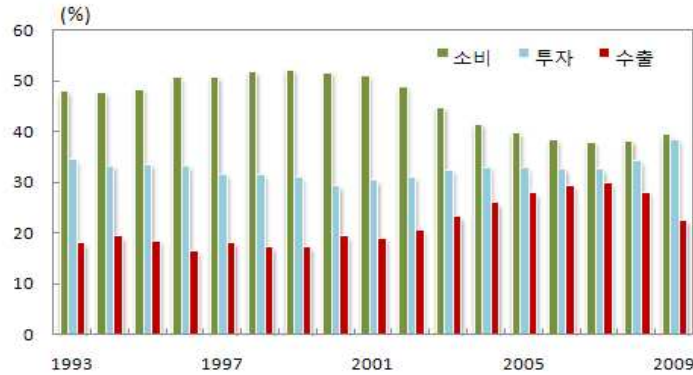
(수출부문 위축에 따른 고용 사정 악화와 사회 불안정을 우려)

□ 위안화 절상에 따른 기업의 수출 감소 및 수익성 저하는 고용사정을 악화시킬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 사회의 안정을 위협할 수도 있는 문제로 인식*

* Business monitor(2010.4Q)는 중국의 장기 정치전망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로 Indonesia-style chaos(1997년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정권 교체)를 제시했는데, 이는 다년간의 경기침체로 조직화된 대중 소요사태가 급증하면서 외자 이탈과 함께 정권이 붕괴하는 상황

○ 중국경제의 최종수요(소비+투자+수출)중 수출 비중은 금융위기 이후 낮아졌으나 여전히 20%를 상회하여 중요한 위치를 차지

최종수요중 수출 비중



자료 : World Bank Data

- 위안화 절상시 중국 수출업자는 달러 표시가격을 올리거나 수익을 줄여 대응할 수밖에 없는데 어떤 방식이든 수출과 고용의 감소가 불가피
- 특히 중국의 수출을 주도하는 컴퓨터·통신장비 및 의류·섬유는 수출(40.7%)뿐 아니라 고용(수출관련 근로자중 비중 52.1%)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이익률은 상대적으로 낮아 큰 타격을 받을 우려

주요 산업 이익률 및 고용비중

	전체	수송 장비	일반 장비	전기 장비	화학	의류 섬유	컴퓨터 통신
수출비중 ¹⁾	100.0	4.9	4.2	11.2	5.2	15.3	25.4
매출액 세전 이익률 ²⁾	6.3	6.5	6.8	6.2	5.9	5.2	3.6
수출관련 근로자중 비중 ³⁾	100.0	3.9	4.0	7.3	4.0	28.0	24.1

주 : 1) 2009년 중국 수출중 비중

2) 중국 제2차 경제센서스 결과(2009.12.25)

3) 수출관련 근로자중 비중(산업별 고용인원 × $\frac{\text{산업별 수출액}}{\text{산업별 산출액}}$)

자료 : CEIC, 국가통계국

— 이중 외자기업은 전체 제조업 인력의 22.4%(2008년 기준)를 고용하고 있는데, 최근 임금상승 추세에 위안화 절상으로 수출부진까지 겹칠 경우 생산기지를 베트남 등 다른 나라로 이전할 가능성

— 또한 내자기업은 중소기업(종업원 2,000명 이하) 비중이 높은데다 채산성이 낮은 노동집약 업종에 집중*되어 있어 위안화 절상에 취약

* 중국은 아직까지 자본집약적인 기간산업 및 인프라 업종에 민간투자를 제약하고 있어 민간은 주로 노동집약적인 수출업종에 진출

2009년 현재 전체기업의 99.0%, 이중 종업원 300명 이하의 소기업이 95.8% (공업정보화부, 2010.8.19일)

• 섬유 의류업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*에서 90%의 기업이 전체 이익의 10%만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나 영세하고 위안화 절상 대응능력이 떨어지는 이들 기업(종업원수 약 2,500만명)에서 실업이 집중 발생할 가능성

* 종업원 500인 이상 기업 5만개를 대상으로 조사. 칭화대학 중미관계연구센터 저우스젠 연구원, 21세기경제보(3.18)

□ 계량 분석에서도 위안화 절상시 경상수지나 성장보다는 고용부문이 더 큰 충격을 받을 것으로 나타남

○ IMF는 5% 절상시(실질실효환율 기준) GDP 성장률이 5년 동안 총 1%p 감소하고 고용증가율이 총 0.75%p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(2010.7월) 했으며

Deutsche Bank는 10% 절상시(달러화대비 명목환율) GDP는 0.6%, 수출(물량기준)은 2.5%, GDP대비 무역수지 비율은 0.7%p, 고용은 0.4%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(2010.4월)

— 중국경제의 2000년대 연간 성장률 및 고용증가율이 각각 10%, 2.3%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성장보다 고용부문 충격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음

— 위안화 절상시 무역수지에 대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은 중국 수출중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가공수출 분야에서 소재·부품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자연헤지(natural hedge)가 발생하기 때문

○ 최근 원자바오 총리가 “중국이 20~40%의 위안화 절상 요구를 받아들인다면, 수많은 중국기업들이 도산하고 실업이 발생할 것이며 많은 이주 노동자들이 귀향하게 되는 등 엄청난 사회적 격변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”이라고 언급(9.22일)한 것도 이러한 고용충격을 반영

— 중국 정부가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8%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려는 바오파(保八)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현 정치체제 유지에 필수적인 사회 안정을 위해 매년 900만개의 일자리 창출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

— 특히 농민공(농촌출신 도시 노동자)중 70% 가량이 노동집약적 수출업종이 밀집해 있는 동부지역에서 일하고 있어 이들이 1차적 타격을 받을 경우 사회의 불안요소가 될 가능성이 높음

□ 한편 과거 2005~08년의 위안화 절상시와 비교할 때 노동비용 및 생산성, 대외여건면에서 지금이 모두 불리

○ 최근 잉여노동력이 감소하는 가운데 정부가 노동자 권익보호 강화, 소득분배* 및 호적제도 개선 등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어 노동비용이 상승**하고 있으나

분업화·전문화·개방화 등을 통한 생산성 향상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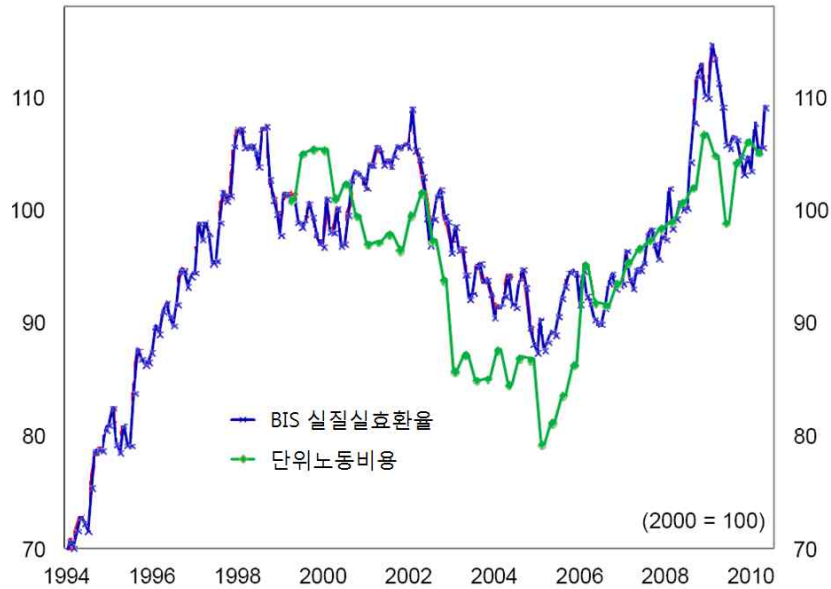
* 임금단체협상 등을 규정한 임금조례 제정, 향후 5년내 근로자소득 2배 증대 계획, 사회보험세 징수 방안 등

** 2011~15년중 명목 GDP 성장률은 11~12%로 예상되나 평균임금상승률은 13~14%에 이를 전망(The wrong version of income doubling plan, Merrill Lynch, 9.22일). 또한 중국 인민대학 경제연구소는 임금 결정 메커니즘이 변화하고 있어 향후 5년간 임금상승세가 지속적으로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(10.6일)

→ 단위노동비용 상승세가 지속되어 수출경쟁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실질실효환율 절상률이 과거*보다 높을 것으로 예상

* 2005~08년도에는 명목환율이 21% 상승하는 동안 실질실효환율은 12.5% 상승에 그쳤음

단위노동비용과 실질실효환율 추이



자료 : People's Republic of China: 2010 Article IV Consultation, IMF(2010.7월)

○ 대외경제 여건을 보면, 2005~08년도에는 미국 등 선진국 경기가 호조를 보여 우호적인 수출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최근에는 이들 국가의 성장세가 부진

— EU 및 미국의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무역분쟁 확대, 일부 수출산업의 구조조정* 등으로 수출 증가율이 금년 20%대에서 2011~12년 10%대로 둔화될 전망

* 고에너지소비, 과잉설비 업종(6대 수출산업 분야 406개 항목)에 대해 수출 증치세(부가가치세) 환급을 폐지(7.15일 발효)

**(중장기적 경제정책 추진과 위안화 절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경우
과도한 하방리스크 발생)**

□ 중국정부는 앞으로의 경제정책을 고도성장에서 안정적 성장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계획

- 내년부터 시작되는 제12차 5개년 계획의 주요 내용은 ①서비스업 육성 등을 통한 내수비중 확대, 산업구조 고도화 ②도농간, 지역간, 계층간 균형 발전을 위한 포용적 성장*(inclusive growth) ③외환, 금융시장의 점진적 개방 및 자유화 등이 될 것으로 관측

* 2007년 ADB에서 처음 제시된 개념으로서 금년 9.16일 후진타오 주석이 제5차 APEC 인력자원개발 장관급회의 개막식에서 공개적으로 언급

□ 이러한 경제정책의 전환 과정에서 어느 정도 성장률 저하와 실업 발생이 불가피한데 여기에 위안화 절상까지 겹칠 경우 중국정부가 용인하기 어려운 거시경제면에서의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

- 제12차 계획의 목표성장률이 11차(7.5%)에 비해 낮아지고 부문별·지역별 노동력 재배치에 따라 구조적 실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

- 자본시장 개방 및 금융 자유화 추진으로 핫머니 유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, 위안화 절상기대심리까지 가세할 경우 거시경제 정책 운용에 어려움 가중

(중국책임론과 관련된 또 다른 양보를 해야 할 상황을 우려)

□ 최근 서구 선진국을 중심으로 중국 경제 책임론이 다양한 형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부의 압력에 의해 위안화 절상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향후 다른 현안에 대해서도 비슷한 양보를 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우려

○ 앞으로 지적재산권, 비관세 장벽, 금융시장 개방, 에너지 및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화될 가능성

□ 또한 외압에 의해 위안화 절상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중국이 글로벌 불균형을 초래한 책임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뿐 아니라

모든 정책결정은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한다는 중국 정부의 기본 방향에도 어긋나는 것으로서 수용하기 어려움

(일본의 전철을 답습할 가능성 경계)

□ 일부 전문가*들은 중국이 위안화 절상 압력을 수용하면 장기불황을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을 위험이 있다고 지적

* 리다오쿠이 인민은행 통화정책위원, Mckinnon 프린스턴 대학 교수 등

○ 중국이 위안화 절상에 따른 수출 및 고용 악화에 대응하여 완화적인 재정, 통화정책을 지속할 경우 일본과 같이 자산버블 발생 및 붕괴 후 디플레이션에 빠질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

□ 중국도 이러한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지는 않으나 80년대말의 일본과는 달리 부동산 등 자산가격 급등 위험성에 충분히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주장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음

3. 향후 전망

□ 중국은 표면적으로 위안화 환율절상에 반대하는 여러 논리와 주장을 펴고 있으나 환율조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어 이를 점진적으로 실행에 옮길 것으로 예상

-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마찰은 오히려 전 세계적인 중국경제론을 확산시킴으로써 2020년까지 세계강대국으로 도약하려는 중국 정부의 장기계획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적절한 선에서 위안화 절상압력을 수용할 가능성

— 다만 외부압력에 굴복했다는 인상을 주지 않기 위해 IMF, G20 등 공식적인 모임을 통해 환율조정을 천명하기보다는 미국과의 비공개적 채널을 통해 타협을 모색

- 중국 내부에서도 성장방식 및 경제구조가 전환점*을 맞고 있는 데다 국내 경제 문제 해결**을 위해서라도 위안화 절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꾸준히 제기

* Morgan Stanley는 중국 경제가 과거 한국(1988), 일본(1969)과 마찬가지로 소비, 서비스업, 노동소득 비중이 확대되는 구조적 변화를 겪으며 성장세가 둔화되고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는 변곡점(inflexion point)에 있다고 분석 (Chinese Economy Through 2020, 2010.9월)

** 인플레이션 압력 완화, 외화보유액의 누증에 따른 관리부담 완화, 내수 비중 확대 등, 핫머니 유입방지 등

- 한편 위안화 절상과는 별도로 중국 경제론 및 무역분쟁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수입확대정책, 임금 상승 등을 통한 내수부양, 외국인 투자정책 전환 등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에 적극 나설 전망

- 중국의 목표는 국제수지균형 달성이며(원자바오, CNN, 10.2일), 향후 GDP 대비 경상흑자 비율*을 4% 이하로 낮출 것임(이강 중국인민은행 부총재, 10.9일)

* 중국 경상수지의 GDP 대비 비율(IMF)

2000~04년중 2.4% → 2005~08년중 9.3% → 2009년 5.8% → 2010.상반기 4.9%

- 수입확대, 수입관세 구조 개선, 수입 절차 간소화 등의 조치를 취해 수입을 장려하고 공정무역을 촉진할 예정(상무부, 9.21)

- 임금상승은 내수부양을 통한 수입확대 뿐 아니라 중국의 물가상승을 통해 실질실효환율을 절상시켜 무역수지 불균형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

— OECD는 2011~2025년까지 중국의 실질실효환율이 20% 절상될 것으로 분석(OECD Economic Outlook, 2010.5월)

- 중국정부가 가공무역 금지업종 확대, 첨단 제조업 우대 등 선별적인 외국인투자 유치정책을 추진하고 있고

외국자본도 중국의 내수시장 및 우수인력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어 외자기업에 의한 무역흑자 규모도 감소할 전망